

가구당 年158만원 절감 효과... 자사고·사립외고 제외

대학가 소식



올해 단국대 부동산·건설대학원 부동산경영학과에 함께 입학한 김왕수 씨(오른쪽부터), 부인 김미라 씨, 남동생 김인수 씨./단국대학교

단국대 대학원 가족 3명 동시 입학 '화제'

부부와 남동생 등 가족 세 명이 같은 대학에 나란히 입학해 화제다. 그 주인공은 올해 단국대 부동산·건설대학원 부동산경영학과에 함께 입학한 김왕수(48·용인 삼성이앤씨 대표) 씨와 부인 김미라(45) 씨, 동생 김인수(45) 씨다. 단국대 부동산·건설대학원은 김 씨 가족에게 장학규정을 적용해 등록금의 15%를 감면해줬다.

한국외대 초·중·고 외국어 경시대회

한국외국어대학교는 오는 6월 23일 전국 초·중·고등학교 외국어 경시대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 30회째(초등부는 17회)는 맞이하는 경시대회는 국내에서 가장 오랜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는 외국어 경시대회로 매년 정기 개최된다. 올해 참가자는 대한민국 국적자로 국내 초·중·고 재학생 누구나 응시할 수 있으며, 내달 3일 오후 5시까지 홈페이지에 접수하면 된다.

세종대 북극연구소 개소 세미나

세종대학교는 지난 4일 세종대 북극연구소 개소를 기념해 전국 각지의 북극 연구 전문가들을 초청 '북극의 개척자(Arctic Pathfinder)'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세미나는 외교부 북극협력대표, 해양수산부 극지정책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극지연구소, 한국원자력연구원, 영산대학교 등 국내 북극 연구를 주도하는 기관과 전문가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북극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활용, 북극으로 가는 장애 요인 해결 방안 등에 대한 토론으로 진행됐다.

상명대 총학생회 '강원 산불피해' 모금활동

상명대학교는 서울캠퍼스 총학생회가 강원도 산불 구호 지원을 위한 모금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학생들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자체 SNS를 통해 모금에 재학생들이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총학생회는 지난 8일 시작한 모금을 11일까지 진행, 12일 재해구호단체인 희망브리지에 지원금을 직접 입금할 예정이다. /한용수 기자

고교 무상교육 시행

기숙사비·참고서 등은 학부모 부담 고등학생 137만명 규모 혜택 예상 국가·시도교육청 절반씩 재원 분담 "안정적 재원방안 아냐" 우려 제기

올해 2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단계적으로 시행되면, 일반고 학부모는 기존 초·중학교 무상교육처럼 입학금과 수업료, 교재비 등을 지원받는다. 하지만 기숙사비나 식비, 참고서 등은 학부모가 부담해야 한다. 또 학교장이 수업료 등을 정하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나 사립외고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9일 확정해 추진키로 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 보고안'을 보면, 고교 무상교육은 고교 진학률이 99.7%에 달하는 등 국민의 교육기본권 보장을 명시한 헌법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우리나라만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고교가 의무교육이고 무상교육도 시행한다. 일본의 경우 고교가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무상교육이다.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교 무상교육 시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당·정·청 협의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참여정부에서 중학교 의무교육이 시행됐고, 문재인 정부에서 고교 무상교육까지 확대돼 초·중등 교육의 공공성 강화가 완성된 셈이다. 문재인 정부는 법적 근거와 예산 확보를 위해 올해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고교 무상교육에 따라 학생이 있는 가구당 월 13만원의 가처분소득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350원) 기준 월 16시간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현재 국공립고 평균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 등은 연간 약 160만원이다.

고교 무상교육에 대해 지원받는

고교는 고등학교와 고등기술학교나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로 재학생 수로 보면 137만명 규모다. 다만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중 재정결함보조를 받지 않는 학교 94개교(재학생 6만8000명)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들학교는 자사고와 사립외고 등으로, 현행 사립초·중학교처럼 무상교육 지원을 받지 않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사립 초등학교 대부분과 일부 사립 특성화 중학교의 경우 의무교육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자사고와 사립외고 등 학교장이 입학금과 수업료를 정하는 학교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취준생 '꿈의 금융회사' 남녀 모두 KB국민은행

잡코리아 금융권 구직자 설문 IBK기업은행)NH농협)신한은행

금융권 신입직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들이 가장 취업하고 싶은 금융회사로 KB국민은행이 꼽혔다.

잡코리아는 올해 금융권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 1260명을 대상으로 매출액 상위 50개 금융회사를 보기로 제시하고 복수응답을 받은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조사결과 취준생 45.2%가 KB국민은행에 취업하고 싶다고 답했다. 이어 IBK기업은행(33.3%), NH농협(28.6%), 신한은행(23.0%), 우리은행(17.2%), KEB하나은행(15.4%) 순으로 은행 취업을 선호했다.

남성과 여성 모두 KB국민은행 입사를 가장 많이 선호한 가운데 남성 취준

생은 IBK기업은행(37.8%), NH농협(30.0%), 신한은행(22.1%), KEB하나은행(14.7%) 순으로 집계됐다. 여성 취준생은 IBK기업은행(31.0%), NH농협(27.8%), 신한은행(23.5%), 우리은행(20.0%) 순으로 취업하고 싶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취준생들은 이들 기업에 취업하고 싶은 이유로 '직원 복지'와 '높은 연봉'을 꼽았다. 해당 기업에 취업을 선호하는 이유를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직원 복지제도가 우수할 것 같아서'(49.6%)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 '연봉이 높을 것 같아서'(42.5%), '평소 기업 이미지가 좋아서'(29.2%)라는 답변이 많았다. 이 외에 가장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으로 보여서'(27.8%), '기업의 제품/서비스에 만족해서'(14.7%)라는 응답이 나왔다. /한용수 기자



웅진코웨이-중앙대 '클린캠퍼스' 조성 맞선 웅진코웨이는 중앙대학교와 '클린 캠퍼스'를 만들기 위한 협약을 맺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웅진코웨이는 중앙대에 '클린캠퍼스' 조성을 위한 발전기금을 지원하고 벽걸이형 공기청정기 400대를 교내에 설치할 계획이다. 이혜선 웅진코웨이 대표는 "앞으로도 웅진코웨이는 환경과 사회에 도움이 되는 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우리 사회에서 상생의 문화가 자리잡는데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혜선 대표와(왼쪽)와 김창수 중앙대학교 총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웅진코웨이

내일 '낙태죄' 결론 내린다... 여성계 '촉각'

7년 전 4:4 마지막 선고

지난 수년간 숱한 찬반논란의 대상이 됐던 '낙태죄'의 위헌여부가 오는 11일 내려진다. 헌법재판소는 산부인과 의사 정모씨가 형법 제269조 1항과 제270조 1항이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오는 11일 결정을 선고하겠다고 9일 밝혔다.

형법 제269조 1항은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법률이고 제270조 1항은 낙태수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는 것(촉탁 낙태)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 되면 지난 2012년 재판관 4(합헌) 대 4(위헌)로 합헌결정을 내린지 7년만에 새로운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지난 7년전에는 4:4로 팽팽한 의견차이를 보였지만 그 동안 낙태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논의가

무상교육으로 지원되는 교육비는 입학금과 수업료 등이다. 기숙사비 등은 제외된다. 무상교육비 지원 방식은 실 소요금액을 산정해 반영하는 증액교부금 방식이다. 증액교부금이란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 국가예산에 따라 별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한 종류로 참여정부에서 중학교 의무교육 완성시 재원 확보 방안과 같다.

재원은 일반 지자체 지원분(17년 결산 기준, 1019억원, 총소요액의 5%)을 제외한 금액을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국가와 교육청이 50%씩(총 소요액의 47.5%) 분담한다.

한편 교육계는 고교 무상교육 취지에 공감하지만 일각에서는 재원 부담 방식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재원 마련 방식에는 우려를 표명한다"며 "시도교육청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되지 않거나 협조를 구하지 못하면 과거 누리과정 사태가 재연될 우려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무상교육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안정적인 재원 방안을 확정하지 않고 서둘러 시행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MB정부 '땃글공작' 국정원 직원 유죄 확정

이명박 정부시절 국정원이 운영했던 땃글공작부대 관계자들에게 실형 확정판결이 나왔다. 국정원 직원들은 물론 민간인 신분이었던 외곽팀장들도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최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심리전단 사이버팀 파트장 장모(5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개

월,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여직원 황모(52)씨는 징역 7개월에 자격정지 1년의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채택된 증거를 살펴보면 유죄판단을 내린 원심은 법리오해 등 잘못이 없다"면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라고 판결했다. /장용진 기자

상당부분 진전됐고 임신초기의 낙태를 금지한 것은 지나친다는 의견에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이번에는 현재의 입장에 변화가 생겼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법조계 내부에서도 "전면적인 낙태 허용은 어렵겠지만 부분적인 허용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보다 우세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때문에 낙태죄를 완전히 위헌으로 보는 '단순위헌'보다 '일부 위헌' 혹은 '한정위헌' 결정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데 의견이 쏠린다.

단순위헌으로 결정이 되면 해당 법률은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낙태죄의 경우 지난 2012년 마지막 합헌결정 이후의 모든 낙태죄 처벌은 무효가 돼, 낙태죄로 처벌받은 사람은 재심을 통해 무죄선고를 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는 길로 열린다. /장용진 기자 ohngbear@